

중소 20.4% “대기업 갑질 경험했다”

전국 중소기업 500곳 대상 설문조사 결과 주무 부처 중기부 역할 ‘부적절’ 응답 32.8% 김원이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노력 필요”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감액이라고 답했다. 이어 부당한 계약 취소 및 변경이 25.5% (26곳), 부당 반품 23.5% (24곳), 대금 미지급·지연 지급 21.6% (22곳) 순이었다. 공정위의 제재와 중기부의 조정 등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불공정 판매거래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묻는 문항에는 무대응 및 수용이 55.9% (57곳)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협의를 통한 조정은 49% (30곳)를 차지했다. 응답기업 500곳 중 최근 3년 내 대기업에서 원부자재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275군데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8.9% (52곳)로 나타났다. 구매거래에서도 부당한 공급단가 결정·인상을 겪었다는 응답이 69.2% (36곳)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제품을 판매할 때와 구매할 때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각각 20% 수준으로 비슷하게 나타난 것이다.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의 원인에 대해서는 59% (295곳)가 ‘대기업의 상생노력 부족 및 무분별한 이익 추구’를 꼽았고, 대상 기업의 16% (80곳)는

‘불공정거래 처벌이 약해서’, 14.8% (74곳)는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낮아서’라고 응답했다. 불공정행위 근절 관련 주무부처 중기부의 역할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또는 다소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32.8% (164곳)를 차지해 ‘적절하다’는 응답 13% (65곳)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에 대해서는 66.2% (331곳)가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등 납품단가 제값 받기 환경 조성’을 꼽았고,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및 투자강화’ 43.4% (217곳),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대책 마련’ 42.4% (212곳) 순

이었다. 김원이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이 여전히 것으로 드러났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중기부의 역할은 부적절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대기업과 거래시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중기협동조합에 계약조건 관련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입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전국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9월23~27일까지 이메일과 전화로 병행해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4.38%다. /김진수기자

與 대표·원내대표 ‘특별감찰관’ 신경전...계파 싸움 번져

秋 절차 진행 ‘원내 사안’ 제동 韓 “대표 원내·외 총괄” 반박 의원총회 두고 친한·친윤 갈려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표출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이견이 집권여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계파간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려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 경호계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고 제동을 걸자 한 대표가 다시 대표의 당무 권한 행사 범위를 ‘원내·외 총괄’로 규정하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민들 공감받기 어렵다”며 특별감찰관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도입을 비합리적 이유를 들어가며 회피한다면 여론과 민심으로 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 “먼저 우리가 변화하고 쇄신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싸울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는 저희 당 입장에서 정치적 호기일 가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국민의 1번 관심사인 김 여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해소를 해야지만 그런 호기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친윤계는 특별감찰관 추천이 국회의원의 총의를 모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한 대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특별감찰관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 연동은 우리 당론이고, 당론을 변경하려면 원내대표와 상의를 사전에 해야 했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독선이고 독단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련,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범위에 대한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에는 당 대표가 당무를 통할하고,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고 돼 있다. 전날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국회 운영과 관련된 원내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이날 “당 대표가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원내든 원내외든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연합뉴스

특별감찰관 추천을 논의할 의원총회 개최를 두고도 친한계와 원내 지도부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친한계는 전날 오후 의원들 단체대화방에서 의원총회를 조속히 열라고 추 원내대표를 압박했고,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감을 다 마치고 의원님들 의견을 듣는 의원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친한계는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종합감사가 종료된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원내지도부는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인 다음 달 1일 이후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조계원,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서 돈보이는 활약

22대 총선 후 6개월 만에 치러진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국감 전반을 장악하면서 민생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사진)이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감에서 돈보이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 이어 24일 열린 종합국감에서도 유인촌 장관에게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관련해 불법적이고 불공정적인 절차가 확인되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게 꼭 책임을 묻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회복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는 “한 국문체육위원회 정병국 위원장이 한 국문화진흥을 이상철 대표 낙하산 인사를 지적하는 질의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심각한 거짓 진술로 일관했다”며 “정병국 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고 전제수 상임위원장에 강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 지역화 정책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문금주 “벼멸구 피해 보상 불합리한 점 있어”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사진)이 24일 농수위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농림부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지만 발생 면적조사와 피해 접수 과정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따르면 농림부가 벼멸구의 최소 피해율을 농약대 30% 이상, 대파대 80% 이상으로 정했다. 이는 이전 이상기후 재해의 경우보다 피해율 기준이 각각 10%p가 높아진 것이다. 또한 벼멸구 피해접수 시 피해입증을 위해



사진을 첨부하도록 했는데 농림부가 벼멸구를 재해로 인정 한 시점이 10월8일로 전남의 경우 9월 말부터 이미 수확이 시작됐기 때문에 일부 수확이 완료된 농가는 증빙할 사진이 없어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문금주 의원은 “피해보상 접수 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정부가 직접 챙겨 피해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